

전북서 저출생 문제 해법 찾는다

전북자치도-전북연구원-전북여성가족재단,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세미나... "일·생활 균형 환경 등 필요"

"안정된 일자리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만,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될 것이다.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찾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는 등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특화 정책을 발굴하고자 논의의 장을 27일 마련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지역이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생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남(0.97)·강원(0.89)·경북(0.86) 등 여타 도농복합 도시보다도 낮고, 광주(0.71)·대구(0.7)·인천(0.69) 등 대도시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의 날인 지난 7월 11일 실현 가능한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전략'을 구성해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부연구위원, 한일장신대 이혜숙 교수,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 연구소 조막래 연구위원 등이 나서 각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 대응 방향 모색', '저출생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린치핀 : 전북형 일·생활 균형 정책환경 진단 과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비롯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 이를 고려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혜숙 교수는 전북지역에서의 합계출산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가임 연령대별 미혼율과 기존 여성의 무자녀 비율 상승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년여성에게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 △주출산 연령대 낱셋 결혼 지원 정책 강화 △생애주기별 출산 지원 정책 등을 제시했다.

현재 전북지역은 가임 연령대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중 25~29세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30~34세 무자녀 증가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조막래 연구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MZ세대가 생각하는 팬텀은 일자리 인식 조사(2022년)를 토대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인 인

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도민의 일생활 균형 환경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의 사회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 생명 존중센터 이운자 센터장, 경북연구원 안성호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선임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백경흔 강사가 참여한 토론의 장이 이어져 전북의 저출생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이날 저출생 대응 세미나는 다자녀 가구 채용 목표제 도입, 과격적인 주거정책 등 실효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진정희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전북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식품사막 현상 확산 원인은 문제의식 부재

서남이 도의원, 식품사막 해소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소멸기금 활용, 이동식 판매서비스 창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남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사막이란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신선식품 등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멸 위기 지역의 행정리 안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어 거주하는 고령층의 식료품 등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진단하고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발제자로 이문수 농민신문 기자가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김광선 사무관, 거금도 농협 추부행 조합장, 숭실대학교 오주현 학생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문수 기사는 오래전부터 대두된 식품사막 현상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재한 것을 꼬집으며, "농촌의 식품사막 현상은 도시의 미래이며, 식품사막은 생존의 문제다. 기존 자원 활용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푸드트럭'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2024 전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자인 오주현·유성훈·이승연 학생의 '이동식 식료품 판매 서비스'와 현재 운영 중인 거금도 농협의 이동식 판매 '화북점'이 눈길을 끌었다.

좌장으로 나선 서남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하거나 이동식 판매서비스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다양한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윤수봉 도의원,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수석부회장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완주1)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오후 대전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윤수봉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로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보장할 때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하반기 정기인사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 가결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지난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지 남원시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승진 인사 적정성 △인사위원회 개최 적정성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 위반 여부 △개방형 지위 임용 목적 및 채용 절차 적정성 △민선 8기 인사행정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민주 김운덕 의원, '치유관광산업 육성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운덕 의원(전주갑)은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별자치도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한화 903조 415억 원)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운덕 의원은 '치유 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 관광의 정의 및 치유 관광자원, 치유 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 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며, 치유 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 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해 전북을 포함한 치유 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 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유 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땀방 걷기'를 치유 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 관광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운덕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동부권은 물론 서부 해안권 등을 중심으로 치유 관광산업에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산물 가격안정제 먼저 도입해야"

민주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 편성 발표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18조 7,496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입안정보협의 졸속 확대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협을 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수입안정보협의 내년도 예산을 2,0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입안정보협 대상 품목을 기존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품목별 가입률을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수입안정보협의 확대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농식품부의 내년도 수입안정보협 분사업 추진 발표는, 윤석열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반대

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추진했던 수입안정보협의 일부 확대를 졸속으로 '분사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7개 품목에 달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조차도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면서 "기존의 9개 품목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수입안정보협은 시범사업의 확대일 뿐, 분사업의 추진이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15개 품목 외의 나머지 품목은 수입안정보협의 사각지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협의 15개 대상 품목 역시 기존의 시범사업 9개 품목은 전국 실시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분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도입하는 품목은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며 "말로는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협의 분사업 추진을 외치지만 정작 분사업으로 추진할 준비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태환 기자

원대한 꿈의 세계

WONDERLAND WKU

원광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4. 09. 09(월) ~ 2024. 09. 13(금)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2024. 09. 23(월) ~ 2024. 09. 27(금)

www.wku.ac.kr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